

2017 서른 여섯번째 인권주일 자료집

교회와 인권

천주교 인권위원회

목차

여는 말 3
2017 인권주일 강론자료집을 준비하며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걸어온 길, 걸어갈 길 4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를 바탕으로

천주교인권위원회, 1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6

강론글1. 30년 만의 개헌, 가톨릭 신자들이 주권 행사 확실히 하는 법 15
좌세준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

강론글2. 사형집행중단 20년,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18
홍성수 교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

강론글3. 더 강한 군사력만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거대한 환상에 부쳐 24
- 사드,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강론글4. "1,867억 감당할 수 있겠어요?" 30
- 기본권을 넘어 인간으로서 존엄까지 흔드는 손배가압류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강론글5. 아르바이트 노동인권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의 변화 38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7 인권주일 강론 강사 파견 43

고권일의 그림이야기 44



사진 : 황수영

발행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발행인 김형태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전화 02)777-0641
디자인 언제나봄그대곁에

인권주일 강론자료집을 준비하며

1년 전 광장에 모인 촛불의 힘은 불의한 정권과 국정농단 세력들을 결국 끌어내리고 처벌받게 했습니다. 더불어 온 세계가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을 동경하게 만들었고, 스스로를 '촛불대통령'이라고 칭하는 새로운 정권도 탄생시켰습니다. 얼마 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1주년 기념대회〉 시민 발언이 떠오릅니다. 광장에 다시 모인 시민들은 하고 싶은 말, 해야 하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은 촛불광장의 주역이었지만 여전히 어디에서도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나라를 망친 공범이라 불렸던 공영방송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구성원들의 파업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경영진들은 아직도 번번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소성리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었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는 한국사회 탈핵 시계를 수십 년 뒤로 돌렸습니다.

양심수들은 아직도 감옥에 있고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꼭 필요한 개혁 입법과제들마저도 지난 정권의 적폐 세력들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새 정부는 과연 우리의 기대와 설렘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시민들과 다시 광장에 모여 서로를 자축하고 격려하면서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촛불집회 1주년 기념대회 제목이 "촛불은 계속된다" 이었던 모양입니다.

인권운동의 시선은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로 향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어깨도 여전히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30년 동안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 곁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웃들의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우리 힘은 미약하지만 단호한 자세로 정치권력과 자본 앞에 굴복하지 않으며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서른여섯 번째 인권주일 자료집 「교회와 인권」은 흔들림 없이 가야 할 길을 가겠다는 천주교인권위원회의 다짐과 약속입니다. 그 다짐과 약속을 지켜봐 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앞으로도 변함없이 응원과 후원을 보내주시라는 간곡한 청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정의와 평화, 생명과 인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7년 12월 10일
서른여섯 번째 인권주일을 맞이하며
천주교인권위원회 드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걸어온 길, 걸어갈 길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를 바탕으로

인간 기본권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 언어, 종교에서 기인하는 차별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극복되고 제거되어야 한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中)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우리의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청과 관심에 가톨릭교회가 함께 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곁에서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지켜내고 이 땅의 모든 차별을 반대하는 사제, 수도자, 자매, 형제들이 함께 활동하는 공동체입니다.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산하 인권위원회로 시작하여, 1993년 천주교인권위원회로 독립 출범하여 내년이면 활동 30년을 맞이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조작간첩사건들의 진상규명활동과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세월 속에 묻혀버렸던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에 의한 사법살인 인혁당재건위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0여년의 노력 끝에 재심에서 무죄를 이끌어 냈고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조작과 고문으로 만들어진 간첩 사건들의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 등 악법들의 폐지와 개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의를 우리 사회에 증거하기 위해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군, 검찰, 경찰, 구금시설 등에서 공권력이 일으키는 인권침해들에 대응하고 공안기구들을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오랜 시간 끈질기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부당한 정리해고와 온갖 차별 속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폭력과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사고파는 집을 짓기 위해 살고있는 집을 부수는 재개발과 뉴타운의 환상에 밀려 점점 도시 변두리로 쫓겨 가는 서민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감옥에서 평생을 갇혀 살며 온갖 인권 유린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 생활인들의 곁에 서 있고 싶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운 눈물 흘리는 이들이 더 이상 없기를 기도하며 그들 곁에서 함께 싸우고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당한 정리해고와 국가폭력 피해의 상징이 되어 버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시멘트와 항공모함에 바다와 구럼비 바위를 빼앗기고 감귤 농장 대신 경찰서와 구치소를 오가야 하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 살려고 올라간 망루에서 경찰특공대의 강제진압으로 인해 주검이 되어 돌아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용산참사 유족들, 평생 일구어 온 땅과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765KV 송전탑을 막아서다가 경찰들에 사지가 들려 내쫓긴 밀양 할매할배들,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능력한 대응으로 304명을 잃은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오늘도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4.16 세월호 가족들,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지셨지만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던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바로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곁을 지켜야 할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 모두의 이름입니다.

유엔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인권정례검토(URP)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비롯한 수많은 조약기구들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연대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한반도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못하게 견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형제도 폐지라는 전 지구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의 사형폐지 활동가들과 살인피해 가족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며 아시아와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매년 300여 건 이상 무료인권법률상담을 매주 월요일 오후 진행하며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분들이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후원을 거부하고 어렵고 힘든 고비를 꿋꿋이 이겨내며, 부족하나마 나름대로의 결실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아낌없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가톨릭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격려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오늘을 있게 해 주신 유현석 변호사님과 이돈명 변호사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유현석 공익소송기금과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을 통해 지난 8년간 70여건의 중요한 공익소송들을 진행했고, 지금까지 여섯 차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밀양 765kv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무지개농성단,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전쟁없는 세상에 이돈명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과 함께 보다 성숙하고 공신력 있는 공익인권단체로서의 외형적 조건들도 갖추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4년 10월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갖고, 2005년 6월 16일 주무관청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8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10월 5일자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되었고, 2017년 9월 29일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제5호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게 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36호).

이에 따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기부금을 낸 후원회원 분들은 천주교인권위원회로부터 발부받은 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시 현행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후원회원 분들이 납입하신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1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1항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국(02-777-0641) 으로 연락주시면 즉시 발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란 상호 비방과 무익한 비판이나 무력시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는 대화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하신 교종 프란치스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관심과 후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지금처럼 걸어가야 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천주교인권위원회 모습을 지켜 내겠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1년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 공익소송팀

○ 월요 법률상담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20년간 매주 1회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해 왔습니다. 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명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상담실에서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교우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익소송(유현석공익소송기금)

천주교인권위원회의 모든 공익소송은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들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우리 위원회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족들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교우들과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 서울구치소 과밀수용 헌법소원 사건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수용인원이 적정한 수를 초과하면 수형자의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싸움·폭행 등 교정사고가 잦을 수 있”으며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떨어트려 결국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2007년 7월 홈에버 월드컵몰점 근처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죄 등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2012년 12월 7일 경찰에 자진출두하여 노역 수형자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바 있습니다. 청구인이 수용된 거실은 수용면적이 7.419㎡이고, 수용정원이 6명이므로 1인당 면적이 1.24㎡(0.375평)로서 평균적인 체형을 가진 성인 남성이 팔을 펴거나 발을 뻗기도 어려울 만큼 매우 비좁았습니다.

● 용산참사 유가족 등 한국공항공사 앞 연행 사건 집시법 및 업무방해 모두 무죄 대법원 확정 판결

2017년 1월 12일 대법원은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었던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2013년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강제 연행된 사건 관련 업무방해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과 업무방해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서영효 판사는 2015년 11월 집시법 위반(해산명령 불응)에 대해서는 무죄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100만 원~300만 원의 벌금에 처한 약식명령을 깨고 1명의 활동가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다른 4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강태훈)는 업무방해 역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진행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해산명령이 아니라고 보아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 무죄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주차장 차량출입 차단기 앞에서의 피켓시위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차량 진입을 막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다른 출입구로 한국공항공사 직원 등이 차량을 출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해 업무방해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국내 첫 법원 결정

2017년 2월 14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은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성전환자 여성)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영동지원은 △신체외관상 여성으로의 변화와 여성으로서의 성별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외부성기 형성 수술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외부성기 형성 수술이 의료기술상의 한계와 후유증의 위험이 크고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는 사고나 질병으로 생식기 등을 절제한 경우와 다르지 않음에도 성별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며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이 혐오감, 불편함 등을 느낀다는 주장은 다양성 존중과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주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동안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성전환자 남성)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이래 동일한 취지의 허가결정이 다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전환자 여성에 대해서 외부성기 형성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한 것은 이번 결정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영동지원의 결정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 무죄 판결

대법원이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피고인 김랑희씨는 민주노총이 2013년 5월 1일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1500명과 함께 프라자호텔 앞 양방향 6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4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017년 1월 19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헌숙)는 채증사진 파일 및 파일을 출력한 사진이 원본 파일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청 수사과로부터 내사지시를 받은 경찰관 김00이 원본 파일이 아닌 원본 파일이 복사되어 있는 CD를 송부받았는데 원본 파일을 CD로 복사하는 과정이나 CD에서 컴퓨터로 복사하는 과정에서 해쉬(Hash)값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CD의 사진파일에 이미 피고인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어 일부 편집작업을 거친 이후의 것으로 보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모든 디지털 파일은 편집 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흔적 없이 편집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채증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4월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실시간 위치추적 등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

2017년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2012년 희망버스와 2014년 철도파업에서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등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2012년 경찰은 송경동 시인 등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해 몇 달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었고,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휴대전화도 함께 위치가 추적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 중이던 철도 노동자들과 초등학생을 비롯한 그 가족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이통사는 대상자의 위치를 10분 혹은 30분 단위로 경찰관에게 알려줍니다. 인터넷의 경우 대상자가 접속했을 때 접속 위치의 IP주소를 알려줍니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과거의 위치가 아니라 장래의 위치를 장기간 추적한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사기법입니다. 그 대상범죄와 요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국가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승소

대법원이 밀폐형이 아니라 여닫이문만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설치된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유치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첫 판결을 내놨습니다. 2017년 10월 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개방형 화장실 사용이 "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가급적 용변을 억제하는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도 크며, 아울러 다른 유치인이 용변을 보는 경우에도 같은 공간에 노출되어 불쾌감과 역겨움을 느꼈을 것임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명백"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하고 국가가 피해자 40명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기획연대사업팀

여섯 번째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위원회를 진행하였고 평화운동단체 〈전쟁없는 세상〉을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월간 소식지 '교회와 인권' 발간과 천주교인권위원회 회원 친목 문화모임 '두부한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7기 사법연수원생 2명이 일주일 동안 법률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들과의 대화, 인권강의, 나눔의 시간 등을 가졌습니다.

◎ 교회사업팀

서른 다섯번째 인권주일 강론자료집 '교회와 인권 2016'을 발간하여 전국 4000여 곳의 성당과 수도회, 공동체 등에 배포하였고 인권강론 강사 파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3년에 발행한 청소년과 함께 읽는 인권이야기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천주교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PDF 파일로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청 본당에 한하여 책자를 배송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 개정판 발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인권정책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18년 3월 배포를 목표로 청소년 토론수업용 교재 발간 사업을 〈인권교육센터 들〉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순시기에 네 번째 인권연속 강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이야기 다큐멘터리 〈안녕 히어로〉 상영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사형제도 폐지운동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20년이 되는 해인 2017년을 맞아 사형제도폐지특별법 발의와 국회통과를 위해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국회·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대표발의로 하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 발의를 결의하고 하반기 집중적인 활동을 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10월 10일, 15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을 국회에서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흥식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형태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과 국회의원들,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20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 통과를 위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11월 2일에는 합정역 폼텍웍스홀에서 가수 이상은과 한동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 법사회학자 홍성수 등이 출연하여 사형폐지 세미나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11월 30일 세계사형반대의 날 퍼포먼스, 공지영 작가 등의 출연하는 12월 15일 일산 백석동성당 생명이야기 콘서트, 12월 30일 사형집행중단 20년 기념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형폐지 청소년 토론용 교재 발간, 호베르 바멩데흐 프랑스 전 법무부 장관 저서 〈사형폐지를 위하여〉 번역 출간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故 김훈 중위 사건 진상규명

1998년 JSA 내에서 사망한 김훈 중위 사건은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으로 꼽히는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지금까지 진실규명과 국방부의 사과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2월 24일 천주교인권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고 김훈 중위 19주기 추모 미사를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이영우 신부님의 집전으로 봉헌하였습니다. 지난 9월 1일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 불능 사건으로 분류되었던 김훈 중위를 순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28일 대전 현충원 장교·사병 7묘역에서 가족들과 육사 52기 동기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안장식이 거행되었습니다.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2016년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총 23차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퇴진행동은 주말 광화문 집회를 비롯하여 삼성본관~서울중앙지법 행진, 서울중앙지법 사거리 집중집회, 기자 간담회 등을 병행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당시 야 3당 대표 면담을 통해 박근혜

퇴진과 적폐 청산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수차례 촉구했고 퇴진행동이 공동주최하는 6대 긴급현안(세월호특별법통과, 백남기농민특검,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 언론장악저지, 미군사드배치저지, 성과퇴출제 중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 10일 박근혜 파면 이후, 촛불승리집회와 촛불승리콘서트 등을 개최했고 대선이후까지 퇴진행동과 상황실을 유지한 상태에서 활동을 이어가기로 하고 4월 29일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를 마지막으로 5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해산을 선포하였습니다. 퇴진행동의 기록과 기념을 위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를 남겨 후속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10월 28일(토) 광화문 광장에서 1주년 기념대회를 5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진행했고 촛불 팟캐스트, 백서발간, 기념 조형물 제작 등이 준비 중입니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에버트 인권상을 대한민국 촛불시민들이 받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 역시 대단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광장 민주주의와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

◎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

지난 6월 서울에서 〈함께 걸어온 길 10년,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강정후원주점을 진행하였고, 7월 31일부터 8월 5일 까지 열린 〈2016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 연인원 3천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중심으로 진행해왔던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을 제주의 많은 현안과 한반도 평화를 외치며 행진하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으로 확장하였습니다.

◎ 감옥인권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심의가 제60차 세션(2017년 4월 17일~5월 12일) 중 5월 1~2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2006년 5월 이후 11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에 3월 20일 국내 64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국가기관의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공권력 남용의 평가를 담은 NGO 공동보고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공동보고서에는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의 무력사용 △국가보안법을 통한 자유의 억압 △구금시설에서 구조적으로 행해지는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 외에도 △2015년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의 물대포와 캡사이신 사용 △유가족들의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탄압 △박근혜 정부의 예술검열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문제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사법부 독립 및 법관 정년보장 △이주노동자 학대 진정 및 조사제도 △아동매매·성착취 및 체벌과 학대 △난민신청인의 추방·귀환·송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기능과 독립성 △고문피해자 배상·시효 폐지·사회복귀 프로그램 △대용감방 폐쇄 및 교정시설의 구금조건 향상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NGO 참가단이 심의 기간 제네바 현지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 상황과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를 알렸습니다.

5월 11일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통해 △백남기농민 사망과 관련된 7명의 경찰관에 대한 검찰청과 경찰청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수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원회에 사법절차의 결과를 알릴 것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수사, 기소하고 그 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 △국가보안법을 개폐할 것 △사형제를 폐지할 것 △영장과 사법 심사 없는 영창에서의 군인 구금을 중단할 것 등과 함께 교정시설의 독방 구금이 최후 수단으로서의 예외적인 조치로서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공권력감시대응팀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발생 500일이 되던 3월 27일부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500일이 되던 4월 25일까지 한 달여 간 집중적으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시법·경직법 개정안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총 871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6월 21일 백남기투쟁본부 및 박주민·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입법청원안은 △살수차를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직사 살수와 최루액·염료 등 위해 성분 혼합살수를 금지하며 사용 현장을 영상녹화하고 명령자·사용현황 등을 기록 보관하며 △차벽 설치를 금지하고 △국회·법원·청와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삭제하며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9월 27일에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법정형이 장기 10년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회 단순참가자에 대한 긴급체포도 가능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집회 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시위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은 본래 입법목적에 비춰봐서는 맞지 않는 법적용이라고 답변한바 있으나 그와는 별도로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은 집회 탄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육로, 수로 또는 교량에 장해물을 설치하거나 교통로의 표지 그 밖의 부속물을 손괴, 제거, 변경하거나 허위의 표지나 신호를 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집회·시위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일반교통방해죄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개정안 통과 전이라도 신규 입건을 하지 않을 것과 기존 기소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4월 10일 국회에서 차기 정부 필수개혁과제로 경찰개혁을 제안하는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은 각각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공조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비판을 잠재우며 사회를 통제해왔습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검찰과 국정원의 개혁에 따라 자칫 과도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시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적 통제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수사 경찰과 일반 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권한분산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의결기구화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경찰개혁과제로 제안했습니다.

대선 이후 경찰청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히며 각종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인권친화적 경찰이 되겠다는 선언에 앞서야 할 것은 용산참사부터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에서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의 역사에 대한 반성이어야 합니다. 이에 6월 1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처벌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정책 시행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감시 근절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의 실질화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조속한 이행 등을 요구했습니다. 6월 30일에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와 함께 경찰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7월 5일에는 국회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2008년 광우병촛불집회 △세월호 참사 △2015년 민중총궐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정리해고 투쟁 △철도노동조합의 파업 △강정해군기지 건설 △밀양 송전탑 건설 △용산참사에 관한 발표에 이어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이호중 상임이사의 발표와 전체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6월 16일 경찰청은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 조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추진한다며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위원회는 △인권보호(인권위 권고 사안을 분석·재검토, 개선방안 마련 / 집회관리·초동조치 등 경찰력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 △자치경찰(자치경찰제 도입방안(모델) 연구 및 검토 /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수사개혁(수사·기소 분리 등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방안 마련 / 경찰 수사 신뢰 제고방안 마련) 분과를 두고 민간위원 19명을 위촉했습니다. 이에 10월 12일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보경찰 및 보안경찰의 문제점과 개혁의 방향 △경찰의 국민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의견과 함께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HIV감염인/에이즈환자 △성소수자 등에 대한 경찰 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6월 19일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그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가 설치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적폐청산 T/F에서는 그간 제기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에 대해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출발은 국정원의 탈법 위법행위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6월 21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로 △18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탈북민 수사과정 인권침해 실태 및 간첩조작 사건 △보수단체 자금지원 및 관제데모 동원 의혹 사건 진상조사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사건 등 15건을 발표했습니다.

9월 26일에는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 및 기능 축소방안으로는 △수사권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 및 대북정보로 제한 △심리전 활동 폐지 △사이버 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 등을 제안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방안으로는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기관 감독기구(옴부즈맨 등)'를 설치해 국회의 감독기능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대통령 책임 하에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전임 상임위로 전환하고 보좌관 지원을 보장하며,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원의 자료제출과 답변거부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블랙리스트 배급사 시네마달 지킴이연대

독립영화전문제작배급사 〈시네마달〉은 세월호를 다룬 첫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을 배급한 이후 세무조사와 지원 탈락 등으로 경영에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후 김영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서 시네마달에 대한 '내사'가 언급된 것이 밝혀졌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운동에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시네마달〉을 통해 개봉과 배급을 맡겨 왔던 독립영화 감독들과 각종 사회적 사안들의 당사자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블랙리스트 배급사, 시네마달을 구하라"를 출범시키고 스토리펀딩과 특별 상영회를 여는 등 독립영화들의 개봉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한겨레21 김완 기자, 씨네21 정지혜 기자, 인권중심사람 박래군 소장, 밀양아리랑의 박배일 감독, 인디포럼 의장 박홍준 감독 등의 기고문과 허지웅 작가와 변영주 감독 대담, 권해효 배우와 부지영 감독 대담 등의 연재가 이어지며 1억 1천만 원을 모금하는 등 큰 화제를 불러왔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수년 만에 외부 추천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선임되었고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가 출범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의 일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과제 의견서 제출, 국가인권위원장 면담, 신임 사무총장 간담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청와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등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 인권운동더하기

2004년 창립한 인권단체연석회의가 〈평등과 연대를 향해! 인권운동더하기〉로 새롭게 전환했습니다. 전환과 함께 신입활동가 공동 교육, 개헌토론회, 인권궐기대회, 인권네트워크 파티 등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는 인권프로젝트 '그날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15회 인권활동가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사과를
받기까지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진 : 백남기투쟁본부

강론글 1. 30년 만의 개헌, 가톨릭 신자들이 주권 행사 확실히 하는 법

좌세준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

30년 만의 개헌,
가톨릭 신자들이 주권 행사 확실히 하는 법

좌세준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

매주 집으로 〈평화신문〉이 배달됩니다. 하지만 저는 인터넷을 통해 〈평화신문〉 기사를 읽을 때가 더 많습니다. 관심 있는 기사를 스크랩해두는 것도 인터넷 신문이 훨씬 편합니다. 종이 신문을 오려서 스크랩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고, 그 기사를 링크해두면 그만입니다. 기사 제목으로 파일을 정리해두면 나중에 파일을 열어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 글을 쓰면서 열어본 평화신문 기사의 제목은 「그리스도인, 정치에 무관심해선 안 돼」입니다. 2015년 5월 10일 평화신문 7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 '가장 뛰어난 형태의 자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2015년 4월 30일 교황청에서 이탈리아 CLC(Christian Life Community, 그리스도 생활 공동체)와 SML(Student Missionary League, 학생선교연합) 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황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년 6월 13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4년에 한 번 도지사와 시장, 군수,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날이지만, 이날은 향후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내년 지방선거일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공약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자신의 공약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의 앞부분에서 교황님 말씀을 인용한 것은 30년 만에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톨릭 신자로서 가져야 할 관심과 참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된 후 총 아홉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된 후 이번 개헌 논의는 꼭 30년 만입니다. "개헌 그거 꼭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30년은 '한 세대'라는 말로 표현될 정도로 긴 세월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 사회는 '양극화' 현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갑·을 관계, 청년실업, 기회균등의 원칙 붕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국민의 안전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 7번의 대통령 선거, 8번의 국회의원 선거, 6번의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지만 '나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생각할 때 우리 정치의'질'은 여전히 기대 이하입니다. 저는 30년 만에 맞는 이번 개헌 논의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개헌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헌은 선거를 통한 '사람의 교체'만으로는 부족했던 지난 30년 동안의 우리 사회의 개혁을 '제도의 교체'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헌은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헌의 중심은 '정치권'이 아니라 '유권자',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개헌 논의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회에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개헌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개정 권력의 주체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주의의 선언입니다. 헌법 개정의 권력 또한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헌법개정 권력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의미는, 헌법 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에서 국민주권이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 또는 대통령에 의해 발의되기 전에, 개헌안을 만드는 절차에서도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헌 절차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주권 행사를 확실히 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2017년 인권주일을 맞으며 우리 모두가 가톨릭 신자로서 가까운 데서부터 개헌과 관련한 주권 행사를 확실히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 개헌특위는 그동안 이루어진 개헌 논의가 '정치권 중심'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 '개헌 관련 배너'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라는 배너가 나오고, 배너를 클릭하면 개헌특위 회의록을 볼 수도 있고, 기본권, 정부형태, 정당·선거제도, 사법, 지방자치, 재정·경제와 관련한 개헌의 주요 의제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개헌이라는 정치적 의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권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참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체인 한국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뛰어난 형태의 자선'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미 우리는 1년 전 1,600만 시민의 촛불로써 국민주권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치의 세계에서 공동선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교황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인권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론글 2. 사형집행중단 20년,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사형집행중단 20년,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

1.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에 대한 사형?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늘 사형제 부활 논의가 있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다. 2000년대 이후만 해도 유영철 사건, 강호순 사건, 오원춘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사형제 부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최근에도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다시 사형제 부활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사형 집행을 부활하자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정확하게는 사형제 부활이 아니라, 사형 '집행'이 문제다. 한국의 현행법은 여전히 사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두고 있고, 다만,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20년을 맞이한 2017년에 다시 사형을 집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형제 집행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는 사형제의 효과다. 과연 사형제가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의 문제다. 두 번째는 사형제의 정당성이다. 사형제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정당한 형벌인가 하는 점이다.

2. 사형제는 흉악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

흔히들 사형제가 (흉악)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치밀하게 모의한 범죄에서는 어차피 '발각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발각될 경우 사형의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충동적인 범죄는 말 그대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 유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사형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무죄가 아니라,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해진다. 아예 검거되지 않거나 무죄를 받는다면 모를까, 사형이 없다고 해도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해지는 상황에서 사형제는 범행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범죄 관련 학회들의 전·현직 학회장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8%가 사형제도가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상식과 달리 사형제는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에 학계 의견은 거의 일치한다. 법과 사회 백과사전(Encyclopedia of Law & Society, 2007)도 "대부분의 사회과학 연구는 사형제가 범죄를 억제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사형과 종신형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대표는 "사형을 안 하니 흉악범이 너무 날뛴다"고 했지만, 문재인 후보는 "사형제 흉악범죄 억제 효과 없다는 사실 실증됐다"고 맞섰는데, 이 문제에 관한 한 문재인 후보의 말이 정확한 것이었다.

3. 사형제는 정당한 형벌인가?

사형제가 정당한 형벌인지도 문제가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오심의 가능성이다. 한국의 경우 1995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재판을 받은 강력범죄 사건 중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 2심에서 유죄로 바뀐 경우가 무려 540건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1973년 이후 사형선고 후 무죄방면된 경우가 150명 이상이다. 1973년부터는 1999년까지는 매년 3건 정도, 2000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5건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다. 설사 나중에 오심이 밝혀져도 복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다.

4. 국제사회의 사형폐지 흐름

국제사회에서도 사형 폐지는 이미 지배적인 흐름이다. 현재 사형을 완전히 또는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국가가 140개 국가로,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다. 유럽 등 소위 선진국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르완다, 토고, 피지, 부룬디, 몽골 등이 동참했다. 2007년 12월 유엔총회에서는 '사형 폐지를 위한 글로벌 집행유예 결의안' 채택되기도 했다. 세계에서 1년에 10명 이상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중국, 이란, 사우디, 이라크, 미국, 수단, 예멘, 이집트, 소말리아, 요르단 정도다. 미국은 선진국 중 예외적으로 사형제를 두고 있는 나라지만 사형제를 폐지한 주가 점차 늘고 있고, 미국 전체로 봐도 최근 집행 건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 주로 동부나 북부 쪽의 18개 주가 사형제를 폐지했고, 미국 전체 사형집행의 80%는 남부에서 집행되고 있다.

한국 국회는 2011년 유럽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맺었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유럽에서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서약했다. 범죄 후 유럽으로 도피하면 사형집행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에서 체포된 범죄자만 사형에 처할 수 있다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한국에서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된 것이다.

아직까지 여론은 사형 존치가 많지만, 전문가와 국회의 의견은 다르다. 2015년에 변호사들은 폐지에 47%가 찬성했고, 2009년에는 형사법 교수 132명이 사형폐지 성명을 냈다.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는 절반 넘는 국회의원들이 사형제 폐지 법안에 서명했다. 2010년에는 한나라당 10명이 사형폐지법안을 내기도 했다. 2015년에는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1996년에는 7:2, 2010년에는 5:4가 나왔으니 위헌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

5. 사형제 폐지와 사회의 책임

흔히 사형제를 통해 범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 사형제는 효과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 세계 각국이 사형제 폐지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더 문제는 사형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사형은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고, 범죄예방을 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기도 한다. 국가는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식으로 빠져나간다. 진정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정책이 필수적인데 사형 집행과 동시에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을 갖추는 것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형제로 모든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나 정치인에게 유리한 것이다.

6. 사형제와 생명존중의 문화

마지막으로 종교인으로서 신의 영역인 인간의 생명을 인간의 결정으로 빼앗는다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범 그리스도교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보편종교들은 생명을 박탈하는 복수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 대상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이어도 말이다. 사형제 역시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빼앗는 것이다. 진짜 생명을 중시한다면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자를 죽일 수 있을까? 고 김수환 추기경은 사형제도를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반생명의 문화"이며, "사형은 용서가 없는 것이죠, 용서는 바로 사랑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흉악범죄의 문제를 포기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자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 흉악범을 엄벌에 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생명만큼은 살려둔 채 용서하고 화해하려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흉악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진정으로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근대의 인도주의 형사법의 원칙도 응보와 복수에서 예방, 교화, 용서, 사랑, 치유, 화해로 진화해 나갔다. 사형제는 이러한 흐름에 명백히 역행하는 제도이다. 사형제 부활 논의가 다시 뜨겁지만,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20년을 맞이한 지금, 진정으로 흉악범죄로부터 자유롭고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한 고민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사형집행중단 20년 / 15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

일시 : 2017년 10월 10일(화)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 소회의실



강론글 3. 더 강한 군사력만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거대한 환상에 부쳐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더 강한 군사력만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거대한 환상에 부쳐

- 사드,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나는 사드 배치 예정지에서 5km 안에 사는 주민입니더. 왜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사드를 배치하고, 왜 미국 무기를 위해 우리를 이렇게 끌어냅니까? 나는 그냥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정말 화가 나고 대한민국 국민 사표 내고 싶습니더. 북한 핵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이 더 무섭고 미국 사드가 더 무섭습니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던 9월 초였다. 그냥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던 산골 마을도 밤이 되면 꽤나 서늘했다. 비가 내려 끈적하던 밤, 한미 정부는 끝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정부는 공권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를 고립시켰고, 맨몸의 시민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상황이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도로에서 꼬박 18시간. 평생을 소성리에서 살아온 팔순의 노인과 서울에서 달려온 학생이, 사제복을 입은 신부와 법복을 입은 교무가 서로 팔짱을 끼고, 몸을 트럭에 묶고, 서로의 팔을 연결한 채 최선을 다했지만 작은 마을은 결국 쑥대밭이 되었다.

사드 추가 배치 후 성주와 김천을 관통했던 감정은 깊은 배신감이었다. 새 정부에 대해 기대가 컸던 만큼, 그래서 투표장으로 향하는 마음이 설렜던 만큼, 이 복잡하고 첨예한 사드 문제 해결의 공을 촛불 정부가 꼭 가져가기를 누구보다 바랐던 만큼, 그 실망감은 크고 깊었다.

박근혜 적폐, 문재인이 완성하다

아직도 선명히 기억한다.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문재인 현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득보다는 실이 커 보인다'며 재검토와 공론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사드 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SOFA 협정 개정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사드는 차기 정부 재검토'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했다. 찬반을 떠나, 적어도 국회 동의 과정만은 거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는 결국 국회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사드 배치 합의·결정, 부지 취득과 공여,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전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 행위와 비민주성에 대한 진상조사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박근혜 정부가 진행한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인정했다. 현재는 '임시' 배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것이라는 엉성한 주장을 하지만, 미군은 이미 땅을 파고 사드 장비를 가동하고 있다.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금과옥조처럼 외쳤던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강행으로 박근혜 적폐를 완성한 것뿐이었다. 화려한 소통쇼가 이어졌지만 사드 기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은 사실 작은 것 하나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게 여름이 끝났고, 가을이 왔다.

바보야, 문제는 MD야

10월의 마지막 날,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중국은 여전히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고, 한국은 여전히 이것이 미국 MD 참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되 사드 갈등을 넘어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간다'는 것이었다. 한동안 정치·경제적으로 첨예했던 한중 갈등이 일단 봉합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하지만 문제는 근본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미일 군사협력이나 미국 MD 참여 등으로 인한 주변국과의 갈등은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임시' 배치라는 말로 묶어둔 사드를 '정식' 배치할지도 언젠가는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절대 방패'를 갖겠다는 욕망 아래 MD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도 이 무한경쟁에 동참해주길 꾸준히 바라왔다. 한국은 한미일 해상 연합군사훈련 정례화, 정보 공유 등 군사협력 강화, 사드 배치 등을 통해 사실상 미일 MD 참여 순서를 밟아 왔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도, 미국은 한국을 대표적인 MD 협력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되었다고 보고 있는 게 정확한 현실이다.

북핵과 MD의 적대적 공생

MD는 우리의 '절대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까? 양측이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 역시 사드를 무력화할 공격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북한은 한미가 갖춰 놓은 요격 시스템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개발해, 더 다양한 각도로, 때로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공격의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이룰 수 있는 목표다.

사드 배치 결정 후 나왔던 이야기들을 유심히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는 사드를 남부권에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에 패트리엇 요격체계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했다. 군은 현재 '바다의 사드'라고 불리는, 역시 미국산인, 이지스함 탑재 상층 방어용 요격 미사일 SM-3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 고도별로 층층이 방어하겠다는 다층 방어체계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MD가 위험한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적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해 사드가 있으면 좋은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단 하나의 북한 미사일이라도 요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군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뤄진다. 따라서 방위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없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냐고,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미 한미동맹은 북한에 비해 군사적으로 절대적 우위에 있다. 대북 억지력은 차고 넘치게 충분하다. 그럼에도 국방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군비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뿐이다. 더 많은 무기로 우리는 더 안전해질까? 더 많은 군사비로 평화가 찾아올까? 모두가 국가 안보를 말하지만 결국엔 아무도 안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북핵과 MD의 적대적 공생 속에 웃는 것은 결국 군수업체뿐이다.

평화를 만드는 평화적 수단, 그래서 대화다

"북의 미사일 시험 후 보수언론은 묻는다. 이래도 대화냐? 단호히 대답해야 한다. 그래서 대화다."[1]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절실한 것은 사드 배치가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다. 대북 적대정책으로 일관하며 북한의 핵 능력이 커져 온 것을 지켜만 보았던 지난 10년의 '안보 무능' 정권은 명백히 실패했다. 군사력 증강에만 골몰했던 지난 실패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 모두가 '국가 안보'를 외치지만 아무도 안전해지지 않는 딜레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결국 답은 사드도, 킬 체인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도 아니라 대화와 협상에 있다. 그리고 압박과 대화는 공존할 수 없다.

트럼프가 "한반도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하고, 북한 정부는 "미국 전폭기가 영공을 넘지 않아도 자위권 차원에서 격추할 수 있다"고 말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제 말해야 한다. 한반도 핵 문제는 평화협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를 위한 주변국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겠다고 말이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군사행동 중단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협상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도 과감히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사드 문제를 해결할 열쇠도 결국 그곳에 있다.

강한 군사력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대한 환상. 매일 그 환상에 맞서는 사람들이 오늘도 성주 소성리를 지키고 있다. 칠순, 팔순의 노인들은 온몸으로 묻고 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사드 배치'냐고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 사회가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

1 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가?, 2017. 5. 17, 서재정, 한겨레



평화가 가난한 이들을 침묵시키거나 구슬리는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려는 구실로 쓰인다면 이는 거짓 평화입니다.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은 자신의 특권을 좀체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안위보다 훨씬 드높은 것입니다.
이 가치들이 위협받을 때 예언자적 목소리를
드높여야 합니다.

복음의 기쁨, 218항

사진 : 황수영

강론글 4. "1,867억 감당할 수 있겠어요?"
기본권을 넘어 인간으로서 존엄까지 흔드는 손배가압류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1,867억 감당할 수 있겠어요?"
- 기본권을 넘어 인간으로서 존엄까지 흔드는 손배가압류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위원회는 (a) 합법파업이 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제약적이어서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점 (b)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에 관한 보고 (c) 파업이 금지되는 '필수서비스'에 관한 정의가 넓다는 점에 우려한다. -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17년 10월 9일자 발표한 최종권고문에서

지난 10월 9일 발표한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권고문의 일부이다. 사회권 위원회는 손배가압류를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라고 명시했다. 국제기구가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민형사상 소송을 활용해 쟁의행위를 가로막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수차례 개정과 시정을 권고한 부문이고, 2017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보고서도 이를 명시적으로 지적했다(물론 한국정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국제기구의 권고에 대해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문에 쓰인 '보복조치'라는 문구가 새삼 감격스러운 건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들의 피해 증언에 가장 가까운 표현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손배청구, 목적은 따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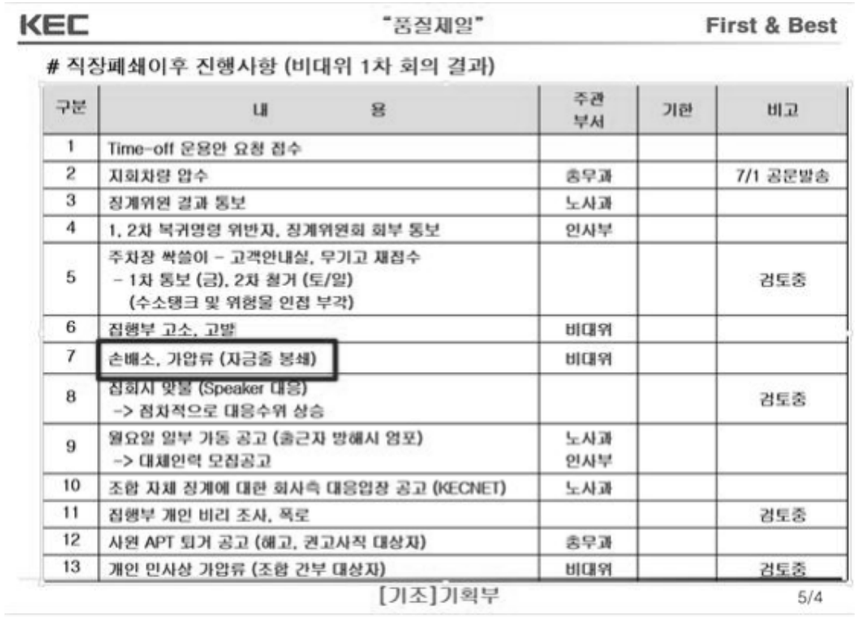
"손배가압류는 손해를 갚으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노조를 깨뜨리는 게 목표고, 노조활동을 한 우리를 회사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회사 밖으로 나갈 때까지 괴롭히는 겁니다."-2017년 2월 8일 토론회 <벼랑 끝에선 손배소 노동자, 법개정으로 살리자>에서

시민모임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잡자!'는 것을 목표로 2014년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30여개의 노동조합과 피해노동자를 만났다. 매달 피해노동현장과 간담회를 하고, 개별 피해사례를 인터뷰하다 보니, 손배가압류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생계'의 곤란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노조탈퇴'와 같이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과 관련된 말이고, '억울함'에 대한 표현이었다.

회사는 "퇴근 후 지도부를 만나지 말라",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협박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회사의 간부가 '301억의 손해배상을 갚을 수 있겠냐, 책임을 면해 줄 테니 이 돈(희망퇴직금)이나 줄 때 나가라! 그리고 나가면 다시는 현장에 돌아가지 못할 거다'라며 퇴사를 종용했습니다. 이 간부가 하는 말들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뭐라 답해야 할지도 몰랐고, 겁이 많이 나서 떨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회사는 수시로 손배 대상자에서 빼주겠다며 퇴사를 강요했고, 저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인사고과마다 고과 'C'와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 KEC지회 압류일지 중(www.sonjabgo.org)

위 증언은 301억 원의 손배소장을 받고 법원 조정이 떨어지기까지 6년을 회사로부터 '퇴사압박'을 받아온 KEC지회 조합원의 증언이다. 증언에서 보이듯, 손배가압류는 당사자가 느끼기에 노동탄압의 수단이고 과정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회사가 손배소를 하는 목적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 때문이 아니라는 물적 증거도 나왔다, 바로 '노조파괴시나리오'다. 회사가 법제도를 악용해 노조파괴를 기획하는 방식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본격화했다. 발레오만도,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KEC 등 금속노조 소속 다수의 사업장에서 '노조파괴시나리오'가 발견됐고, 이 노조파괴시나리오에 매번 등장하는 것이 바로 '손배소, 가압류(자금줄 봉쇄)'라는 문구다(사진).



KEC "품질제일" First & Best

직장폐쇄이후 진행사항 (비대위 1차 회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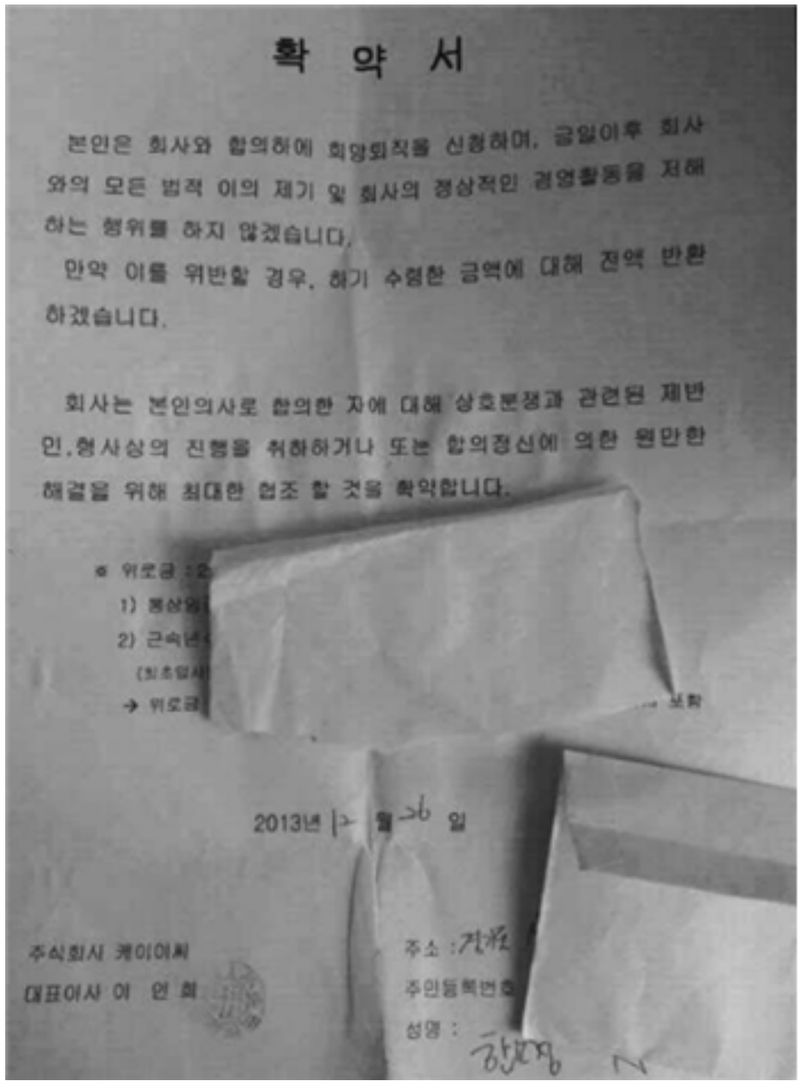
구분	내 용	주관 부서	기한	비고
1	Time-off 운용안 요청 접수			
2	지회차량 압수	총무과		7/1 공문발송
3	징계위원 결과 통보	노사과		
4	1, 2차 복귀명령 위반자,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	인사부		
5	주차장 싹쓸이 – 고객안내실, 무기고 제접수 – 1차 통보 (금), 2차 철거 (토/일) (수소탱크 및 위험물 인접 부각)			검토중
6	집행부 고소, 고발	비대위		
7	손배소, 가압류 (자금줄 봉쇄)	비대위		
8	집회시 맞불 (Speaker 대응) -> 점차적으로 대응수위 상승			검토중
9	월요일 일부 가동 공고 (출근자 방해시 엄포) -> 대체인력 모집공고	노사과 인사부		
10	조합 자체 징계에 대한 회사측 대응입장 공고 (KECNET)	노사과		
11	집행부 개인 비리 조사, 폭로			검토중
12	사원 APT 퇴거 공고 (해고, 권고사직 대상자)	총무과		
13	개인 인사상 가압류 (조합 간부 대상자)	비대위		검토중

[기조]기획부 5/4

▲ 사진 2011년 9월27일 이미경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KEC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문건 일부

노조파괴 기획에 따라 파업을 하면 어떤 이유든 손배소가 제기됐다. 보통 파업에 불법행위가 있을 때만 손배소를 제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소송은 불·합법 여부가 가려지기 전에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회사가 소장에 적어내는 대로 소송이 진행됐다. 물론 소가 진행되는 동안 파업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인정이 되면 승소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소송이 판결로 이어지기까지 기간이 대부분 오래 걸렸다. 게다가 법률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은 회사는 대체로 3심까지 소송을 끌고 가기 때문에, 소송에서 온전히 이기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2017년 기준 손배소송 60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명박 정부 때 제기된 소송이며,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을 정도로 손배소는 대체로 소송 기간이 길다. 긴 소송 기간은 절대적으로 회사에 유리하다.

'확약서'도 손배가압류의 목적이 손해배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소가 진행된 이후 손배소 노동자들은 "노조를 탈퇴해라", "회사를 나가라", "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 체불임금소송 등)을 포기해라"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나 관리자의 '메시지', '구두 협박'을 받았다(사진).



확 약 서

본인은 회사와 합의하에 희망퇴직을 신청하며, 금일이후 회사와의 모든 법적 이의 제기 및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 수령한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하겠습니다.

회사는 본인의사로 합의한 자에 대해 상호분쟁과 관련된 제반 민,형사상의 진행을 취하하거나 또는 합의정신에 의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 협조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3년 1월 26 일

주식회사 케이에씨

대표이사 이 연 희

주소 :

주민등록번호

성명 :

선고 확정이 된 경우에도 노조활동에 제약이 따랐다. 선고 금액을 언제 집행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당사자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도 한다. 일례로 2014년 선고 확정된 D회사의 노조는 그해 손배가압류 피해자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시민 모금으로 마련된 〈노란봉투캠페인〉 기금신청을 거부했다. 노조 이름을 건 대외활동을 할 경우 선고된 10억 원의 배상금액을 집행하겠다는 위협을 받은 탓이다.

금액부터 청구이유까지, 기본권 넘어 '인권침해'

손배가압류라는 덫에 걸리는 순간, 노동자들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피해갈 수 없다. 사실 벌 수도 갚을 수도 없는 손배청구금액 그 자체로도 이미 노동자 개인이 배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임금을 주는 회사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올해 2월 선고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노동자 4명에게 선고된 2010년 파업에 대한 손배청구금액 90억 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무려 45년이 걸린다. 현실이 될 수 없는 일을 회사는 청구하고 법원은 판결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노동자 개인은 인간적 존엄마저 훼손당해야 했다. 천문학적 금액은 비현실적이지만, 경험하지 못한 '공포'는 가족의 생계 등 현실의 문제와 맞물리며 노동자 개인을 회사의 협박과 회유 앞에 흔들리게 한다. 손배가압류 앞에서 포기하고 돌아설 때, 당사자들은 '동료를 등지고', '돈에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했다. 파업의 이유였던 '정규직전환', '부당해고',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법적으로 인정받고도, 손배소송에 지게 되면 회사가 내미는 상호 소 취하를 전제로 한 확약서에 서명 할 수밖에 없다. 개인이 손배가압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회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그게 퇴사라고 해도 말이다.

청구사유도 한몫했다.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교섭을 거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심지어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지속적인 괴롭힘과 용역까지 동원해 폭력을 저지르는 등 파원의 원인을 제공한 회사로부터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당한 것 자체로 '수모'였다. 심지어 재물손괴나 점거가 없는 쟁의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피켓 문구, 구호, 기자회견 발언, 기사 인터뷰 내용, 퍼포먼스 행위까지 다양했다. 이쯤 되면 노조와 관련한 어떤 활동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손배소 압박'에 자결한 동료의 죽음 앞에서 분노를 표한 것조차 4억 원의 손배소장으로 날라왔다. 2015년 이상목 하이디스지회장이 유서를 남기고 자결한 배재형 전 지회장이 생을 마감하기 직전 사장으로부터 '100억 원 손배청구할 수 있다'는 위협성의 발언을 들은 것을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는데, 회사와 사장이 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손해배상청구 협박은 사장 이름의 사내 메일까지 있었음에도, 소를 제기했고, 이 지회장은 집까지 가압류됐다.

손배소송에 이겨도 결과적으로 시간도 비용도 넉넉하지 못한 노동자 개인은 소송 앞에 오래 버틸 수 없다. '법대로 하라'는 말도, '억울하면 소송에서 이기라'는 말도 공허하다.

"법도 내 편이 아니에요.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것뿐인데 직장도, 가정도, 다 위협받아야 해요. 무엇이 법이 지키는 정의입니까? 시간도 노동자의 편이 아닙니다. 가진 사람들은 시간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합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송이 시작되면 생전 처음 해보는 소송에 어리바리하다가 시기도 놓치고, 변호사도 구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마련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은 1년이고 2년이고 금방 지나갑니다. 근로기준법이 있고, 회사가 교섭만 제대로 하면 금방 끝나는 일이었는데..." - 부산 S회사 해고노동자 인터뷰 중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개인의 권리이지만 노동조합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책임도 노동조합 차원에서 져야 한다. 하지만 손배가압류 제도는 노동조합 활동의 결과와 책임을 조합원 개인에게 묻는다. 특히 '돈'을 수단으로 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입는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노조 안에서도 손배대상자와 비대상자를 분리하고, 여기에 회사의 '확약서'와 같이 회유수단이

개입하면 쉽게 노조 밖으로 개인을 끌어내기도 한다. 즉 손배가압류는 개인에게 '노동조합'이라는 울타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수단이 된다.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손배가압류

'손배가압류'가 세간의 이목을 끈 계기를 꼽자면, 2003년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의 '죽음'이 있다. 같은 해 한진중공업 노동자 김주익 씨도 고공농성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두 사람의 유서에 등장한 '통장잔고 0원'과 아이에게 사주지 못한 바퀴 달린 운동화 '힐리스'가 손배가압류의 피해를 인식하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알린 충격은 매우 컸다. 가장의 월급통장과 아이 양육비는 '투쟁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내 일상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죽음'으로 촉발된 폭발적인 관심도 이 제도 하나를 없애지 못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취했던 조치는 '통장잔고 0원' 대신 '최저생계비 수준'을 보전해주는 데 그쳤다. 이 조치는 돈에 가로막힌 '권리'를 짚어내는 대신 '죽음'과 '생존'을 두고 간단히 계산기를 두드린 데 그쳤다. 그나마도 이 조치가 지난 10여 년 간 손배가압류에 대한 거의 유일한 조치였지만, '임시방편'조차 되지 못했다. 이후에도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죽음이 이어졌다. 10년 뒤인 2012년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 씨의 유서에는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이 쓰여 있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2002년 6월 기준으로 345억 원에서 2017년 6월 기준으로 1,867억 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때 바뀌내지 못한 제도는 이후 정부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기업'-'반노조'인 정부 성향에 따라 악화됐다. 결국 '죽음'으로도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과 정부의 소송을 막을 수 없었다. 노동자들이 쟁의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송을 활용한 부당노동행위, 두고 보아야 할까

잇따른 피해호소에도 기업과 정부가 손배가압류 제도를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5년 1월 국가인권위에서 개최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형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과격해지는 상황에서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주는 행위에 면책특권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즉 손배가압류 제도가 '과격한 파업'을 막아줄 거라는 계산이다.

이같은 경총의 입장은 ▲파업의 책임과 원인이 오롯이 노조에 있고, ▲손배가압류 제도가 노조의 '과격한 행위'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전제할 때, ▲손배가압류 제도를 회사가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 가능한 주장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파업의 원인은 대부분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로 일관하는 사측에 있고, ▲절차와 수단을 다 지킨 파업도 사측은 '불법'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걸거나, ▲피켓, 구호 등 물적 손실이 없는 쟁의행위에도 '명예', '모욕',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총의 주장대로 '과격한 파업'을 막았는지에 대한 현실적 근거도 없지만, 반대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사례는 늘어났다.

파업을 줄이고 싶다면, 파업의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 교섭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부당노동행위만 줄여도 파업의 원인 절반은 해결되지 않을까. 손배가압류는 파업을 하는 노동조합을 제거하는 방식일 뿐이다. 손배가압류의 목적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악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노동기본권과 인권마저 침해받는 게 현실이라면, 이 제도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입법청원 www.sonjabgo.org)



연극 노란봉투 깜짝출연 청계피복노동조합 신순애 님
사진 : 손잡고

강론글 5.

아르바이트 노동인권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의 변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아르바이트 노동인권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의 변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최근 아르바이트 현장의 법률 위반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2016년 말 이랜드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4만 4,260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무려 83억 7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해당 금액은 약 11개월의 임금일 뿐,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3년)을 모두 찾아보면 그 대상과 금액은 더 클 것이다. 실제 지난 6년 동안 정부의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점검 실태를 보면, 법률 위반은 점검대상 사업체(2,756개) 대비 평균 80.2%(2,212개)나 된다.

물론 정부도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 특히 최근 일부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매장 등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들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9월에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언론에 다루어진 바 있다. 파리바게뜨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하는 계약직과 아르바이트의 휴가비나 수당 등 미지급 체불 금액이 110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그간 자본과 기업은 홀서빙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비인권적 인식을 보여 왔었다. “그나마 에어컨 등이 나오는 곳에서 일하게 된다는 건 좋은 일이다!”, “최저시급 이상을 주고, 식사 때 빵이라도 주잖아!” 등의 태도를 보였던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 사회에서 ‘아르바이트’라는 모호한 직업군에서 찾아야 한다. 아르바이트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직업군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확산돼 있다. 사실 아르바이트는 ‘좋은 일자리’(decent job)라기보다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의미(bad job)로 더 다가온다. 정부 조사 결과 청소년 다수 고용 아르바이트 사업체에서 16.2%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이 절반 남짓(42.1%)이나 되었고, 이런 곳일수록 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꺾기’와 같은 꼼수도 있다. 저임금도 서러운데 어떤 곳은 각종 유니폼이나 비품을 자비로 구입하도록 한다.

게다가 일을 그만둘 때 다른 사람을 구하기 전까지 일을 계속하라며 임금을 미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사조차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곳은 고온의 기름에 감자를 튀기고 뜨겁게 달궈진 그릴에서 패티를 굽는 과정에 화상과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위험은 매장 밖에도 도사리고 있다. ‘라이더’로 불리는 오토바이 배달은 매년 10.6명의 청소년의 삶을 앗아간다. 패스트푸드 배달 사고는 도달률에 따라 매장의 평가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목숨을 담보로 한 배달을 강제한다. 죽음을 담보로 한 ‘배달 수당’ 몇백 원 때문에 10대 청소년들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찾는다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르바이트 문제는 거대 자본과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운영방식에도 있다. 프랜차이즈는 20세기 중반 이후 각종 서비스업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사업양식으로 발전했다. 프랜차이즈는 1950년 밀크셰이크 판매원(Ray Kroc)이 맥도널드 형제에 의해

운영되던 캘리포니아의 한 레스토랑 권리를 받아 영업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2,973개의 브랜드가 2016년 4,267개로 2배나 증가했다. 가맹점 수만도 10만 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수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는 기업으로 하여금 강력한 브랜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용 절감 특유의 이점이 있다. 게다가 경쟁적인 시장조건과 이윤 창출 압박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법률 위반을 선택(?)한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정의 침해할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파리바게뜨의 전산 자료를 조작하여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주지 않는 소위 '임금 꺾기'와 같은 형태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지난 2016년 11월 맥도날드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불안정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변하는 알바노조 분회 형태다. 당시 알바노조는 한국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잡(Mc job)을 굿잡(Good job)으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맥도날드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일자리를 안전한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피자 배달 30분제,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 열정페이 등 우리 사회 주요 청년 노동 현실을 개선한 청년유니온과 함께 의미가 작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아르바이트는 이제 일회적 노동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군과 노동 형태(평균 3.5회, 고등학교 시기 시작, 1주 21시간 근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법제도적·정책적 ·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개선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우선 지난 몇 년 동안 기초고용질서 위반 사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계약 미체결(40% 내외), 임금 및 수당 미지급 · 체불(90% 수준: 최저임금, 주휴수당, 초과근로 수당 포함)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대응 및 기초노동상담 · 권리구제 지원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지자체들이 서울시처럼 '아르바이트 권리장전 선언'과 다양한 청년 아르바이트 권익 보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시는 무료법률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다. 취약노동자(아르바이트 포함) 보호를 위해 나름의 '사전적 예방'(2012년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맨 제도 출범, 2016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출범)과 '사후적 구제'(2016년 노동권리보호관 신설) 형태를 갖춘 것이다.

우리나라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보편적 인권을 향유하는 데 있어 배제와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와 노동권(헌법 제33조) 그리고 사회보장권(헌법 제34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하여 '동등대우 원칙(1994년, 시간제 근로협약)'을 채택한 바 있고 사회보장제도를 권고(제182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제도 아래서는 적용받지 못하는 조항들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초단시간 포함)의 증가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실질적 사각지대'의 확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내 사회적 배제와 차별과 같은 다차원적인 노동인권침해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중앙, 지방)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노동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보편적 노동인권이 향유될 수 있도록 단기적·중장기적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 구성원들 역시 아르바이트 노동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상품'이 아닌 노동의 권리를 찾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루카 10,7



"끝까지 싸워요. 우리는 이길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겼습니다.


사진: 광화문공동행동

우리는 이곳에 계신 분들의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장관님.
감사합니다.
2017.8.25.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위원회 구성 제안에 답하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은 9월 5일 광화문 지하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1862일만에 농성장을 철수할 수 있었다.

2017 인권주일 강론 강사 파견

1. 앞의 다섯가지 주제를 비롯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인권주일 강론 강사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주일 강론을 필요로 하시는 본당에서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강론단 파견 요청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더라도, 인권주일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시면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본당에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매달 엄선한 인권 사안을 중심으로 매달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 「교회와 인권」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3.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우리 교회와 그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하여 국내 최초의 가톨릭 청소년용 인권교재 「모든 이에게 모든 것(Omnibus Omnia)」을 출간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인권이야기를 쉽게 접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예시와 삽화를 적절히 이용하였으며, 각 항목마다 사회교리를 인용하여 교회 안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필요하신 분께 교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4. 인권주일 강론 뿐 아니라 본당의 각종 모임 또는 교육, 특강 등에서 인권강의가 필요하실 때에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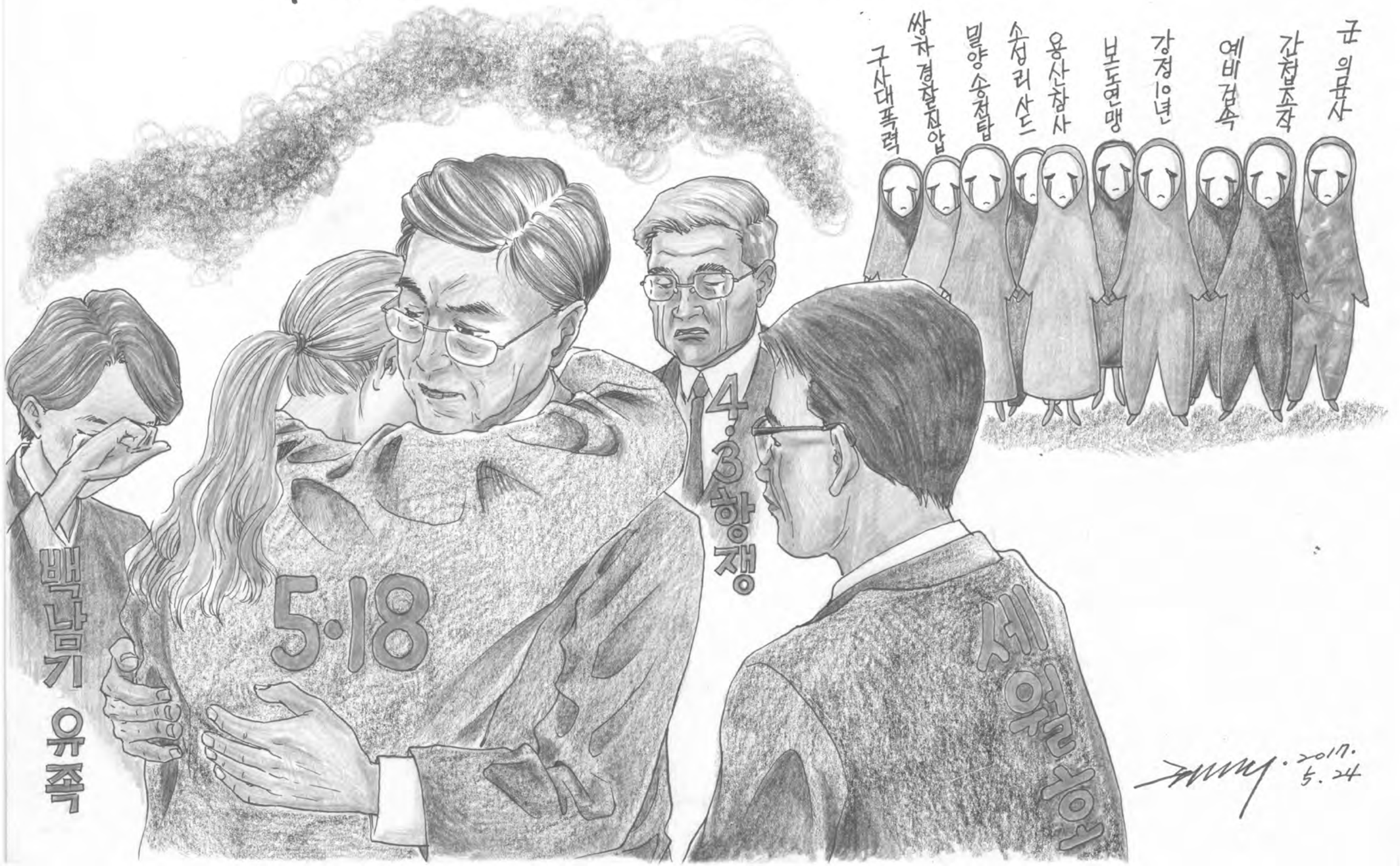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 (02) 777-0641 / chrc@hanmail.net

고권일의 그림이야기


GMO
개발
독재
비선
언론통제
성평등
퇴진
비정규직
원전
블랙리스트
댓글
조-디
성차별
언론탄압
탄핵
프레임


진실을 원해! 정의를 원해! 평화를 원해!
친미
친미해
양선외교
주권+안보
ONLY 안보!
원조 안보
선제 공격!
싸드
세월호
친미하라구!
문
안
유
홍
심
평등이 평화!

이 땅의 모든 아픔이 치유될 수 있기를…





천주교인권위원회를 후원해주세요.

인권주일 2차 헌금을
천주교인권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꿋꿋이 이겨내고
한결같은 모습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위해
지혜와 마음을 모아주신 교회와 교우
여러분들의 힘 덕분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로번호	7618893
국민은행	004-01-0724-877
우리은행	454-035589-13-101
우 체 국	010017-02-544517
농 협	301-0076-9349-51
예 금 주	천주교인권위원회

발행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발행인 김형태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전화 02)777-0641
디자인 언제나봄그대곁에